

‘조국 지키기’ 나선 文대통령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 마련 지시 경질시 각종 국정과제 동력 상실 할 것 우려해 향후 여야 대치 정국 극에 달할 듯...現정권 부담



해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특별감찰반원 비위 적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아권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유임으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과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 문 대

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비리로 시작한 현 사태가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박 8일간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비슷한 일정 직후 즉시 보고를 받은 데에는 문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간단치 않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조 수석에게 이번 사태 해결의 역할을 부여한 것에는 해임은 없을 것이라 강력한 의지로도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지시가 ‘유임

으로 간다는 의미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 수석에 (거취에) 대해 변동이 없었다”고 답하며 유임 결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순방 당시에도 국내 현안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특감반원 비위 의혹을 두고 받아 달라는 표현을 통해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그간 ‘사정 드라이브’를 맡고 있는 조 수석을 문 대통령이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다. 사법개혁과 적폐정산을 주도하는 조 수석이 경질될 경우 각종 국정과제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 우려에서다.

아울러 아권의 공세에 밀려 조 수석을 해임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가세해 ‘조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지키기’는 현 정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아권 달리기 차원에서, 내부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분위기 일신을 위한 인사 교체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수석을 뺀 내부 쇄신이 거세지는 아권의 경질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김무성 “차탄핵은 사과할 문제 아냐”

“문 대통령 거품 지지율 빼면 30%대...레임덕 시작”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친박·비박계 의원간 모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결의안 작성에 논의된 것에 대해 “대화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에 때문에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열린토론회,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비박계 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 등과 함께 모임 자리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총론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고 현재 나라를 잘못 이끌고 가니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고 통합해서 문재인 정

권의 폭주를 막아내자고 합의를 했다”며 “또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고령이고 증거인멸 여지도 없는데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있느냐는 말이 나와 내가 앞장설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석방 촉구 결의안에 대해 “현재 문장을 만들고 있고 그 만남은 1차 만남”이라며 “한번 만나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논의를) 해야한다. 시작단계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친박계 좌장인 서정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후안무치’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그런 공방과 싸움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다”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

갔는데 거품 지지율을 빼면 사실상 30%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생이 망가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실망을 넘어 절망의 단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출발한 지 1년 7개월인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아우성인데도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해가 안 간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거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이날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은 어디로(No free lunch)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민주·한국, 결단해야”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촉구를 위한 야3당 대표 농성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이어갔다.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 로터너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촉구를 위한 농성을 이어갔다. 야3당은 전날 오후 2시부터 4인1조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철야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 간격으로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 릴레이로 농성하는 방식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 로터너홀 농성장에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며 “에

산안과 선거구제를 연계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선거제도 개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이고 여당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렇게 해야지. 왜 지금 와서 탄 얘기를 하느냐.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했다. 이제는 정치제도를 제대로 민주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7일 한국당과 연계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만일 두 당만이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그것은 정권의 재앙이다. 적폐연대성사다”며 “실질에서 몇 조 퍼주고 주고받기 한 예산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나 적폐연대는 몰락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예산안-정치구 연계’를 처음 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했던 1990년 정기국회 예산부쟁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대표다”며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도를 누가 먼저 바꾸려고 했느냐”며 “이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이고 이 정부의 모태가 됐던 이전 대통령이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 국민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선거제도 개혁 입법을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도 화상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를 때 마음을 달리 먹지 말고 관철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3일 이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끝판왕이 지나게 된다. (정와제가) 오늘이라도 5당 대표들 다 모이주고 대통령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세수 결손 대책 등 평행선

김성태 “쉬쉬하고 넘어갈 생각만...대국민 사기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세수 결손 대책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두 차례 만나 ▲남북경협 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한 법안 ▲공무원 증원 문제 ▲4조원 세수변동에 대한 대책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이날 오전 9시 첫 회동에서는 세수결손 대책 등을 두고 사기 등 여야 간 고성이가 터져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첫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그냥 쉬쉬하고 공개고 넘어갈 생각만을 한다”며 “4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수정 예산으로 보완해 국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 대책 없이 결국 국회 발령이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첫 회동 직후 “한국당이 4조원 세수 결손을 문제 삼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도 있고 감액 내역에 대해서 말이 많다”며 “야당이 반드시 감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성이 안 돼 이견이 있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첫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첫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세수 결손 지적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 조정이 된 것이다. 나라의 큰실정으로 보면 변화가 없다”며 “유류세 하나가 결손이 된 것인데 야당도 동의해서 깎아준 것”이라고 했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